



## 국회직 8급 행정학

### 1. 총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2. 출제영역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5
정책론	2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6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5	지방자치론	4

###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2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1
-------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짚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3	-	-	5	-	6	11

| 개념 |

01 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 ① 비용과 수입의 분리
- ② 내부성
- ③ X-비효율
- ④ 파생적 외부효과
- ⑤ 분배적 불공평

- 【해설】**
- ① **[X]** 비용과 수입의 분리(절연)는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절연)로 인해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 ② **[O]** 내부성은 관료제 내에서 공익(공적 목표)보다 개인과 조직의 이익(사적 목표)을 우선시하는 현상이다.
  - ③ **[X]** X-비효율은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해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관리상의 비효율(기술적 비효율)을 의미한다.
  - ④ **[X]**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을 말한다.
  - ⑤ **[X]** 분배적 불공평이란 정부의 권력의 특혜나 남용 등 정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특혜적 기업면허 진입장벽의 유지 등이 있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신용한 행정학 p.69~70



## 02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 ②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중 집권화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 ③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조직구성원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 ④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적응력은 떨어진다.
- ⑤ 유기적인 조직일수록 책임관계가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해설】** ② [X] 집권화란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이나 상위기관에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는 복잡성(complexity)에 대한 설명이다.

### ▶ 올바른 지문

- ②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중 복잡성이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 summary | 상황변수와 조직구조

분류	변수	내용
기본변수 (조직의 구조형성)	복잡성	횡적 분화인 수평적 분화 & 계층화 정도인 수직적 분화
	공식성	조직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의 표준화 정도
	집권성	권력의 배분양태, 권력이 위임되는 수준(집권 or 분권)

  

구분	규모(증가할수록)	기술(비일상적 기술일수록)	환경(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잡성	+	+	+
공식성	+	-	-
집권성	-	-	-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334~341



03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④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 ⑤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① [X]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X]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O] 동법 제7조

**동법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X] 동법 제18조

**동법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⑤ [X] 동법 제16조

**동법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 올바른 지문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 ②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 ⑤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 04 평정상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쇄적 착오(halo error)란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서 범하는 착오이다.
- ② 일관적 착오(systematic error)란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다른 평정자보다 높거나 낮아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박한 점수를 주거나, 후한 점수를 줄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③ 유사성의 착오(stereotyping)란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되도록 왜곡시킬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④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란 평정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⑤ 이기적 착오(self-serving bias)란 타인의 실패·성공을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발생하는 착오이다.

**【해설】** ① [X] 선택적 지각의 착오에 대한 설명이다. 연쇄적 착오(halo error)란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주는 오류를 말한다.  
 ② [O] 일관적 착오(systematic error)란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이다. 평정자가 항상 관대화나, 엄격화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정기준이 높거나 낮은데서 오는 오류이다.  
 ③ [X] 방어적 지각의 착오(perceptual defense)에 대한 설명이다.  
 ④ [X] 유사성의 착오(stereotyping)에 대한 설명이다.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란 타인의 실패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⑤ [X]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에 대한 설명이다. 이기적 착오(self-serving bias)란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개인적 공로는 강조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 ▶ 올바른 지문

- ①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의 착오란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서 범하는 착오이다.
- ③ 방어적 지각의 착오(perceptual defense)란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되도록 왜곡시킬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④ 유사성의 착오(stereotyping)란 평정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⑤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란 타인의 실패·성공을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발생하는 착오이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514~516



05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문화를 단일 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중 차원적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문화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 대 외부, 그리고 통제성 대 유연성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그리고 합리적 목표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조직문화창조모형
- ② 갈등·협상모형
- ③ 혼합주사모형
- ④ 경쟁가치모형
- ⑤ 하위정부모형

**[해설]** ④ [O] 퀴나와 로보그(Quinne & Rohbaugh, 1983)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경쟁가치모형은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조직구조가 통제(안정)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변화와 융통성을 강조하는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인 모형(인간관계, 개방체제, 내부과정, 합리적 목표모형)을 도출하였다.

**summary | 경쟁가치모형**

구 분	조 직(외부)	인 간(내부)
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 목표모형 : 조직 구성원보다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안정을 강조</li> <li>• 목표 : 생산성, 능률성</li> <li>• 수단 : 기획, 목표 설정</li> <li>• 효과성 기준 : 조직의 생산성, 이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과정모형 : 조직 그 자체보다는 구성원을 중시하고, 조직의 안정을 강조</li> <li>• 목표 : 안정성, 균형</li> <li>• 수단 : 정보관리</li> <li>• 효과성 기준 : 조직의 안정성과 균형유지</li> </ul>
유연성 (융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체제모형 : 조직 구성원보다 조직 자체를 중시하고, 구조의 유연성을 중시</li> <li>• 목표 : 성장, 자원확보</li> <li>• 수단 : 융통성, 외적 평가</li> <li>• 효과성 기준 :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통한 조직성장여부가 효과성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관계모형 : 조직 그 자체보다 구성원을 중시하고, 유연한 구조를 중시</li> <li>• 목표 : 인적자원 개발</li> <li>• 수단 : 응집력, 사기</li> <li>• 효과성 기준 : 조직 내 인적자원가치의개발</li> </ul>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104

06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은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
- ② 관계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③ 직무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원 증대,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④ 과정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⑤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해설】** ① [O] 갈등은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을 증진시켜 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

② [O] 관계갈등이란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말하며, 관계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 해줄 필요가 있다.

③ [X] 직무갈등은 작업의 내용과 목표에 관한 갈등을 의미한다. 직무갈등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 간의 목표 충돌 혹은 목표 달성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상위 목표의 제시 등 목표를 명확화하여 해결 할 수 있다.

④ [O] 과정갈등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갈등으로 주로 어떻게 작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⑤ [O]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4225~368



07 「인사혁신처 예규」상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택근무형
- ② 시차출퇴근형
- ③ 재량근무형
- ④ 근무시간선택형
- ⑤ 집약근무형

【해설】

① [X] 재택근무형은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원격근무제에 해당한다.

summary | 유연근무제

유형	세부형태	활용방법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근무시간 선택형	1일 4~12시간 근무, 주5일 근무
	집약근무형	1일 10~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 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 지급분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적 지급분은 지급할 수 없음.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529



08 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트(Wright)의 이론 중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 ②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③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④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 ⑤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 모형으로 나눈다.

**【해설】** ① [O]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형태이며, Wright는 중첩권위형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이상적 관계로 설명한다.  
 ② [O]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위기관 또는 대리기관에 불과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위기관 또는 대리기관에 불과하다고 본다.  
 ③ [X]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대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동반자 모형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동반자의 관계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④ [O]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자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한다.  
 ⑤ [O] 무라마츠 중앙 지방정부 간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통제모형으로 구분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X]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892~895

▶ ③

0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된다.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위임 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O] 동법 제152조

**동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O] 동법 제165조

**동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④ [O] 동법 제168조

**동법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O]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조합의 명의로 공동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효과도 조합에 귀속된다.

▶ 올바른 지문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918~921



10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① [X]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5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O] 동법 제28조 제2항

**동법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O] 동법 제28조 제3항

**동법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O] 동법 제27조 제2항

**동법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O] 동법 제26조

**동법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①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305~308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혹은 당초예산이라고 한다.
- ②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 ③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 ④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 ⑤ 수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 【해설】**
- ① [O] 본예산은 정기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의결·확정한 예산을 의미하며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한 예산이다.
  - ② [O]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 ③ [O]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 ④ [O] 적자예산이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예산으로, 경기침체나 국가적 위기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불균형예산으로,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 ⑤ [X]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이 아직 최종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 올바른 지문

-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summary | 예산의 유형

(1)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본예산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	예산이 확정되기 전(국회의결 이전) 변경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확정된 후(국회의결 이후) 변경

(2)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정지

구분	기간	국회의결	지출 항목	채택국가
준예산	무제한	불필요	한정적	현재 우리나라, 독일
가예산	1개월	필요	전반적	우리나라 1공화국, 프랑스
잠정예산	무제한	필요	전반적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620~622

▶ ⑤

## 12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사무총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해설】 ① [O]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O] 헌법 제57조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X] 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O] 국가재정법 제34조 각호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⑤ [O]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365~368

▶ ③

13 베버(Weber)가 주장했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ㄱ.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ㄴ. 엄격한 계서제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규를 적용한다.  
 ㄷ.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라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ㄹ. 모든 직무수행과 의사전달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ㅁ.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해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Ideal type)는 권위를 3가지 유형(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 권위)으로 나누고, 권위의 유형에 따라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중 법적 권위에 입각한 근대적 관료제야말로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성에 일치하는 조직모형으로 설명하였다.

- ㄱ [O], ㄴ [X]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은 법규에 의한 지배이다. 모든 직위의 권한과 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되며, 법규에 의한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다.
- ㄷ [O] 관료제에서 관료들은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와 연금을 받는다.
- ㄹ, ㅁ [O] 모든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에 의해 규정되고, 임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문서주의는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 올바른 지문

ㄴ. 엄격한 계서제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법규를 적용한다.

summary | 베버(M. Weber)의 이념형 관료제

권 위	관료제	지배형태	특 징
전통적 권위	가산관료제	전통적 지배	권력을 장악한 자의 신분에 의해 유지
카리스마적 권위	카리스마적 관료제	카리스마적 지배	지배자의 특성·자질에 의존
법적·합리적 권위	근대적 관료제	합법적·합리적 지배	법규에 의한 지배, 계층제적 구조, 비개인성 등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348~351

| 개념 |

14 정책평가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정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 ① 선정효과
- ② 회귀효과
- ③ 오염효과
- ④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
- ⑤ 대표효과

**【해설】** ④ [O] 크리밍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크리밍 효과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조건이 나쁜 구성원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일정한 처리를 한 경우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것을 말한다.

**summary |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b>호오돈효과</b>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실험조작 반응효과)
<b>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b>	한 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반복하여 가할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
<b>표본의 대표성 부족</b>	양 집단 간 동질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대표성이 없는 경우
<b>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b>	사전측정의 효과와 실험조작 반응효과의 상호작용으로 실험의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가 곤란
<b>크리밍 효과</b>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301

▶ ④

15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 ②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축장려는 기관위임사무이다.
-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입 주체가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설】** ① [X]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재정법 21조 【부담금과 교부금】**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X]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③ [X]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입 주체가 된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④ [O]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X]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그 집행기관에게만 위임된 사무이므로 그 처리는 집행기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관하여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사무처릴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 ②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입 주체가 된다.
- 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817~820

▶ ④

16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특별회계까지 모두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다.
- ②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
- ③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제외된다.
- ④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해설】**
- ① [X], ⑤ [O]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장에 따라 1979년부터 도입했다.
  - ② [X] 통합재정의 운용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므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측면보다는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 ③ [X]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포함된다.
  - ④ [X] 통합재정은 정부의 재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우리나라는 IMF의 권장에 따라 197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특별회계까지 모두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다.
- ②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용의 통제성이 제고되었다.
- ③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포함된다.
- ④ 통합재정은 정부의 재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628~630

▶ ⑤

17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기본계획에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전자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회예산처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 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냈을 때에만, 직접 그 구비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해설】 ①, ③ [O] 전자정부법 제5조 제1항

**전자정부법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동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② [O] 전자정부법 제5조의2 제1항

**동법 제5조의2 【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O] 전자정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에 미리 해당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등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⑤ [X] 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동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올바른 지문

- ⑤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735~740

▶ ⑤

18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영한다.
-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이다.
- ⑤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

**【해설】** ① [O]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②, ③ [O]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기금의 조성을 위해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O] 우리나라는 기여금 납부기간의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동법 제67조 【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⑤ [X]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동법 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올바른 지문

⑤ 퇴직수당은 정부가 부담한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539~542

▶ ⑤

19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를 때 결정된 징계 종류는?

위원 A: 파면	위원 B: 감봉	위원 C: 강등	위원 D: 해임
위원 E: 정직	위원 F: 해임	위원 G: 파면	

- ① 파면
- ② 해임
- ③ 정직
- ④ 강등
- ⑤ 감봉

**【해설】** ② [O]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즉, 가장 불리한 의견인 파면(위원 A, G)의 의견에 해임(위원 D, F)의 의견을 더하여 과반수 이상을 만들고 이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인 해임이 합의된 의견으로 되는 것이다.

**공무원징계령 제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581~582



20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엘모어(Elmore)의 전방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과 정책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향적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
- ③ 하향식 접근방법에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 ⑤ 엘모어(Elmore)는 통합모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설계단계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에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① **[X]**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란 적응(adaptation)의 관점에서 집행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버만은 정책집행의 문제가 정책과 그것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setting)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이해하며, 집행의 제도적 환경을 크게 거시집행(macro-implementation) 구조와 미시집행(micro implementation) 구조로 구분한다. 논의의 핵심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policy)과 집행조직(organization) 사이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 자체가 성공적인 집행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러한 미시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② **[X]** Elmore가 제시하는 전방향적 접근법은 집행의 조직체계가 계서적 관계로 연계됨을 가정하고, 정책의 원천에 가까울수록 권한과 영향력이 강해지며,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능력은 명령과 통제를 위주로 한 명확한 계서제의 구축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방향적 접근방법은 문제의 원천에 가까이 있는 일선관료의 일선관료의 지식과 능력을 강조하며, 시스템의 문제해결능력은 계서제적 통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가장 근접한 지점에서 재량을 극대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본다.

③ **[X]** 하향식 접근방법에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받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④ **[X]**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목표에 머물게 되며, 정책의 대부분을 집행자들에게 위임하고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관계 유형이다.

⑤ **[O]** 엘모어(Elmore)의 통합모형은 정책프로그램 설계 시 우선 전방향적 접근방법에 의해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되, 후방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276~285

▶ ⑤

21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ㄷ.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다.  
 ㄹ. 각 부(部) 밑에 처(處)를 둔다.  
 ㅁ. 각 위원회 밑에 청(廳)을 둔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해설】 ㄱ [O] 정부조직법 제5조

**정부조직법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ㄷ [O]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

**동법 제26조 【행정각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ㄹ [X] 각 부(部) 밑에 청(廳)을 둔다. 청은 각 부의 집행기능 중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

ㅁ [X] 위원회는 의사결정권자가 복수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각 위원회 밑에 청을 두지는 않는다.

▶ 올바른 지문

ㄹ. 각 부(部) 밑에 청(廳)을 둔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374~376



22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하고 있다.
- ④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 ⑤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① [X]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임자는 인정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설립】**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올바른 지문

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된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543~549



### 23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① [O] 지방재정법 제25조

**지방재정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O] 지방재정법 제45조

**동법 제2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③ [X]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교부금 ×)을 교부할 수 있다.

**동법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O]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동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⑤ [O] 지방재정법 제60조의3 제1항

**동법 제60조의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올바른 지문

③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2020 년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p.879, 890

▶ ③

## 24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 ㄱ.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 ㄴ.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 ㄷ.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ㄷ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ㄹ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올바른 지문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020 년공블락 신용한 행정학 p.711



## 25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 ④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 ⑤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X]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배정(재배정 X)이다. 재배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산하 재무관에게 예산액을 배정하는 것이다.

② [X] 국가재정법 제46조 제3항

**국가재정법 제46조 【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③ [X]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④ [O] 국가재정법 제50조 제1항

**동법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X]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4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명·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올바른 지문

- ① 예산 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⑤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